

# 건설동향브리핑<sup>1)</sup> - 건설 정책 및 경영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I. 건설 정책 동향

### 1. 2017년 정부 경제정책 : 경제 전망과 중점 과제

건설동향브리핑 제592호(2017.01.02) 허윤경 연구위원

#### ■ 정부, 2017년 경제성장률 2.6%로 전망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3.0%)보다 0.4%p 낮아진 2.6%로 예측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2%대에 머물게 되었는데, 민간 연구기관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으로 정부보다 더 낮게 예측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1%, LG경제연구원 2.2%, 현대경제연구원 2.3%). 내수 둔화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확대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회복세가 최근 둔화되었고, 경기 둔화·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新정부 출범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 지속, 중국의 리벨린성, 유럽의 정치 불안 등 대외적인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 ■ 경제정책 3대 분야·9대 중점 추진과제 설정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정부는 ①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② 민생여건 개선, ③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 개혁을 경제정책 3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부문 간 상승 노력을 강화하여 서민의 어려움을 경감하며,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4대 구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경기리스크 관리	②민생 안정	③구조 개혁과 미래 대비
<b>적극적 거시경제</b> · 총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 1분기 역대 최고수준 조기집행	<b>일자리 창출</b> ·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 지원 · 구조조정 영향 흡수	<b>4차 산업혁명 대응</b> ·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 신설 · 핵심 기술 확보 · 산업생태계 혁신
<b>부문별 활력제고</b> · 소비투자 심리 회복 · 수출 지원 및 해외 진출 촉진	<b>소득기반 확충</b> · 저소득층 임금소득 보완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영세자영업자 지원 생계비 경감	<b>4대 구조개혁</b> · 교육·노동·금융·공공 개혁
<b>리스크 관리 강화</b> · 대외건전성 유지, 금융시장 안정 강화 · 취약업종·한계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 가계부채·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b>부문간 상승</b> ·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 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강화	<b>저출산·고령화 대응</b> · 출산율 제고 · 고령사회 준비 가속화 · 우수 외국인력 활용

그림1. 2017 정부 경제정책의 3대 분야·9대 중점 추진 과제

정부는 재정지출(13조원) 및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확대(8조원)하여 20조원 이상을 경기 보강에 운용하고, 1/4분기 내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 한편,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구조 개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맞춤형 대응 체계(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 부양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20조원은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간으로 발간하는 「건설동향브리핑」은 건설 정책·경제·경영 이슈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회지 [CEM Info] 책 전에서는 「건설동향브리핑」 최신호 일부를 요약하여 게재하고자 합니다. 소개된 전문은 www.cerik.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는 장기 과제보다는 경기 진작 및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2017년 정부 경제정책 : 재정 확장과 SOC 투자

건설동향브리핑 제592호(2017.01.02.) 박수진 연구위원

### ■ 2017년 SOC 투자 계획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기본방향의 9가지 중점 추진과제 중 ‘적극적 거시정책’, ‘부문별 활력 제고’등에는 SOC 투자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1. 2017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중 SOC 투자계획

투자계획	세부 내용
공공기관 투자 확대	33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체 여유 자금 및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하여 연간 투자 확대를 계획함.
안전 투자	학교, 공항, 철도 등 주요 SOC 시설들의 내진보강을 확대하고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내진 보강 설비를 추가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복합·연계시설 등 새로운 시설 유형들을 민간투자사업 가능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또한 프로젝트 검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정부의 우선 검토 대상 사업 유형을 16개에서 27개로 확대함.
연기금의 SOC 투자 확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PF)을 통하여 연기금과 민간 자본이 대형 SOC 프로젝트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함.
SOC의 질적 수준 제고	SOC에 대한 종합평가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SOC의 질적 향상 목표를 수립하기로 계획함.
전기차 인프라 확충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들을 계획함.

### ■ 정책 실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써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진보강 뿐 아니라 노후 SOC가 포함된 포괄적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또한 SOC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개수 이상의 투자 대상 사업들이 꾸준히 고시

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중별·지역별 질적 수준 평가에 근거한 투자 우선순위 파악이 선행되고,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를 고려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 3. 2008년 이후 건설산업 구조조정 중간 점검 및 정책 방향

건설동향브리핑 제590호(2016.12.19.) 김민형 연구위원

### ■ 최근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2008년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희석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09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 지속된 금융위기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순위 150위 이내의 중대형 업체의 부실화로 이어졌다. 2012년 부실화된 중대형 업체는 총 25개사(워크아웃 18개사, 법정관리 7개사)였는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시장 회복에 힘입어 2016년 10월 기준, 11개 업체는 부실화 상태를 회복하였으나, 14개 업체는 여전히 워크아웃(5개사)이나 법정관리(9개사) 상태에 있다. 한편, 재무상태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5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0.6%, 당기순이익률 1.2%)은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수준(매출액영업이익률 5.8%, 당기순이익률 1.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건전성도 여전히 취약한 상태(차입금의존도가 2008년 20.0%에서 2015년 25.4%로 상승)에서 업체 수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 향후 시장위축이 기업구조조정 상회할 가능성 높아 선제적 구조조정 및 이를 통한 산업 건전성 확보 필요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일반적으로 주택경기는 정부의 주택 시장 억제 대책을 계기로 하락 국면에 진입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 공급관리에 초점을 맞춘 8·25 대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에 초점을 둔 11·3 대책 등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은 2015년부터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및 인구 수 전망, 중기 SOC 예산 및 건설투자 전망 등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이 점차 하향세에 진입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016~2020년 중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반적인 둔화를 보여 건설투자의 순환주기 평균치를 하회하는 2.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2) 2015년 6월에 출범한 투자협의회로 산업은행이 사업주선 및 금융자문을,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투자운용을 맡으며, 참여기관들이 자금을 납입한다. KDB 인프라자산운용이 제안하는 사업건에 대한 투자 여부를 개별적으로 승인하며, 참여기관들은 연기금, 보험회사, 은행 등 18곳으로 이들 기관들은 14조 5000억 원의 투자한도를 약정하였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 선제적 구조조정, 우량기업 선별 중요, 기업 관점에서 투자와 생산성 향상 노력 병행 필수

선제적 구조조정은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는 달리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구조조정이나 우량기업에 대한 자원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의 적정성’을 기본으로 하여 부채의 적정성 및 고정화된 유후 자산의 정도, 수익성, 생산성 관련 지표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개별 기업 관점의 구조조정은 일본의 비용축소형 구조조정 실패를 반면교사로 수익 창출을 위한 신사업 투자와 생산성 제고 노력의 병행, Spin-Off와 다양한 제휴를 활용한 사업구조 조정, 그리고 재무구조 조정을 통한 신용등급 건전성 유지 등이 요망된다.

## II. 건설 경영 동향

### 1. 미 대통령 당선인의 우선 추진 정책과 국내 파급 효과

건설동향브리핑 587호(2016.11.28.) 박수진 연구위원

#### ■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자, 100일 간의 우선 실행 정책 목표 발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1월 21일 홈페이지 ‘Transition 2017’에 공개한 ‘A Message from President-Elect Donald J. Trump’라는 동영상을 통해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우선적으로 실행할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TPP 탈퇴 및 양자 간 무역 협정 재협상/ 셰일가스와 청정석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산업 규제 철폐/ 1규제 신설 시 2규제 철폐/ 자국 인프라 보호를 위한 안보 조치(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포함)/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 노동자의 비자 악용 방지/ 공직 퇴임 후 5년 간 로비스트 활동 금지(외국 정부를 돕는 행위는 평생 금지 등이다. 전반적인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제 활성화와 법질서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우선 추진 정책들은 취임 후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조치(executive actions)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대선운동 기간 중 강조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은 우선 추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 ■ 취임 후 100일 간 우선 추진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 및 금리에 미칠 영향

TPP 탈퇴 및 양자 간 무역 협정 재협상으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한·미 간 FTA 재협상 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산업 규제 철폐 등 자국 경기부양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국내 건설산업 및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 가져올 듯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무역 및 실질가치분소득 감소,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소비비용 증가, 그리고 부동산 자산 가격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무역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기업규제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 예정보다 금리를 더 빠르게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2. 일본의 재해 대응 시스템 현황

건설동향브리핑 제589호(2016.12.12.) 최수영 연구위원

####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국민들의 재해 대응책 요구 높아져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국민들의 재해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대내적 요구로는 사회기반시설 조기 복구 시스템 마련 및 자연재해 조기 측정 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대외적 요구로는 2020 도쿄올림픽과 세계장애인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제 신용도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지진 예측에 따르면 난카이(Nankai) 해구 지진과 도쿄 내륙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발표하고 있다.

#### ■ 국무조정실의 난카이 해구 재해 기본 대응책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2013년 기존의 난카이 해구 지진 관련 대응책을 강화하는 「난카이 해구재해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에서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예상되는 도쿄, 오사카, 교토를 비롯한 26개 지방행정지구와 707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3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교토 및 13개 지방행정지구와 139개 지방자치단체를 쓰나미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특별법 이행을 위해 정부의 재해 대응 기본방침인 ‘난카이

해구 재해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사망자 수 80% 저감, 건물 피해 50% 저감' 등 인적·건물·경제적 손실 저감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및 시민들의 협업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해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국토교통성의 구체적인 난카이 해구 재해 대책

일본 국토교통성도 2014년 구체적인 재해 대응 방안인 '난카이 해구 거대 지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재해 발생 후 약 7~10일 간에 요구되는 긴급 조치 단계와 평상시에 긴급 조치 단계시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 재해는 긴급한 대응을 요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한다. 일본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단계별,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재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3.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주요 내용과 방향

건설동향브리핑 제588호(2016.12.05), 손태홍 연구위원

■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는 농업 및 수렵 분야와 비슷한 산업계 최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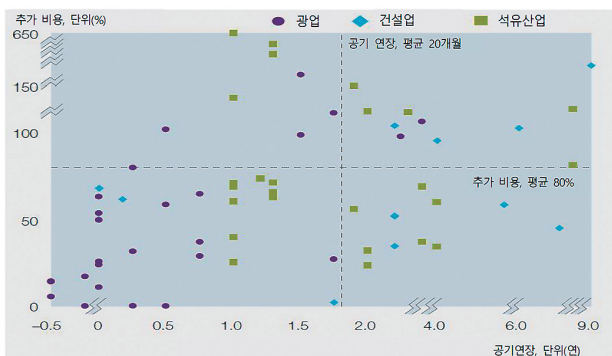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선투자를 수반하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서 뒤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는 매출의 3.5~4.5%를 투자하는 자동차 및 우주항공

분야에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본사와 현장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계획, 리스크 분담과 혁신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계약, 효율적인 실행 관리 및 공급 체계 관리 등 건설사업의 기본 요소에서도 여전히 후진적인 상황이다. 맥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는 최근 발간한 'Imagining Construction's Digital Future' 보고서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대형 건설사업에서 평균적으로 20% 수준의 공기 지연과 80%의 공사비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을 둔 기술 도입과 활용 극대화 필수

맥킨지는 미래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형태를 5가지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 고선명 측량 및 지리위치(higher definition surveying and geolocation), 2) 차세대 5D BIM(next generation 5D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 디지털 협업과 이동성(digital collaboration and mobility), 4) 사물인터넷 및 고급 분석(the internet of things and advanced analytics), 5) 미래에 대비된 설계 및 시공(future-proof design and construction) 등이 그것이다.

혁신과 새로운 기술 활용에 있어 타 산업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건설산업이 향후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참여자간의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1) 계약서상의 위험 분담과 투명성 확보, 2) 미래 산업 비전을 위한 투자, 3)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결 대안의 설계, 4) 기존 관습에서 탈피하고 변화를 추구하려는 조직 차원의 노력 등의 원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업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디지털화 실행을 위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기술 및 혁신 담당 최고경영자를 지정하고, 최고경영자는 디지털화를 위해 기업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나 전략적 협력기업 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팀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그림 2. 산업별 비용과 기간의 초과 수준